

노 대통령 訪美 수행기



▲ 노무현대통령이 벤처기업인들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 6박 7일간의 방미일정에는 이례적으로 벤처기업인들이 경제인사절단으로 참가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벤처·IT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대통령과 벤처기업인이 간담회를 통해 '코드'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은 벤처업계로서는 큰 수확이다.

벤처기업인과의 대화 석상에서 노 대통령은 벤처업계의 M&A 활성화 및 필요성 등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벤처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한 지지와 활성화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그간 소극적으로 느껴졌던 참여정부의 벤처기업 육성 의지에 대한 불안을 일소에 해소함은 물론, 향후 정부의 벤처·IT산업에 대한 가시적인 행보를 기대케 했다.

이렇듯 방미를 통해 노 대통령과의 정책적 교감, 확실한 지원에 대한 신뢰감이 무르익은 지금, 벤처업계는 벤처산업이야말로 기술 및 과학혁신을 통해 신정부가 주창하는 '동북아 시대-Dynamic Korea'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키워드임을 증명해보여야 한다.

국익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혼연일체된 다각적 세일즈외교의 지평을 연만큼, 벤처기업 또한 대기업과 함께 균형성장을 주도하고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 생태계 발전의 중심에서 한국경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목표를 이루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벤처산업의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번 방미를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우리 벤처·IT산업을 향한 미국 시장의 관심은 벤처산업이 한국경제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불러 일으켰다. 벤처산업에 대한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지원은 '할 수 있다'는 도전의지와 자신감을 채워주기에 충분했다.

정통부, 중소·IT벤처기업 M&A 전용펀드 600억 조성

경영난에 시달리는 정보기술(IT)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인수·합병(M&A) 전용펀드'가 조성된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장관 주재로 IT중소·벤처기업 경영에 타개대책 마련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IT중소·벤처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M&A펀드가 기술은 있지만 자금 부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M&A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유중 정책총괄과장은 "펀드의 규모 등은 7월에 결정하되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정부출자 비율을 현재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보화촉진기금의 여유 자금이 30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M&A펀드는 최대 6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통부는 또 IT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를 발주할 때 가격 중심의 최저가 입찰이 아닌 기술력 중심의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조항을 국가계약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관련 예산은 물론 KT,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투자를 상반기로 앞당기고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기술신보, 우수 중기·벤처 적극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기업공개(IPO)등으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주요 회계법인 및 증권회사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체결 회계법인은 삼정, 안건, 안진, 영화회계법인 등이며 증권회사는 대신, 교보, 동원, 한누리투자증권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술신보를 통해 IPO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기업공개에 필요한 회계자문 및 코스닥등록과 관련한 절차 대행 등을 회계법인과 증권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업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고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등록 신청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업활동과 관련된 기관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기업공개뿐만 아니라 M&A, 기술평가, 회계자문 및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 중소 벤처기업 CEO에 경영혁신 교육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중소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경영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등 전국 19개기관에서 중소 벤처기업 CEO 경영혁신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6월16일부터 7월11일까지 4회에 걸쳐 야간과정으로 개설되며 대상은 경영자, 임원, 자금관리책임자로 강좌당 모집인원은 선착순 70명이다. 주요과목은 윤리경영의 중요성, 경영혁신 성공사례, 경영위험 진단 및 대처방안, 수출시장 개척 노하우 등 10과목이다. 교육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며 신청은 6월13일까지 해당지역 교육기관으로 하면 된다.

벤처기업협회 CEO경영혁신과정 상세내용은 KOVA홈페이지(www.kov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코스닥 M&A활성화 나선다

앞으로 자기자본이 60억원에 미달하는 코스닥등록 기업으로 2년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시가총액 50억원을 밑돌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주식맞교환시 취득주식에 대한 과세가 주식취득시점이 아닌 취득주식의 처분시점으로 늦추는 것이 추진된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코스닥시장 M&A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한국증권연구원에 의뢰해 만든 이같은 내용의 M&A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회계연도 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자기자본이 70억 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70억 원 미만일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자기자본이 60억 원 미만인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퇴출조건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등록유지조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M&A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해당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매수청구가격 결정시 시장가치 외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적절히 반영해 매수가격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주식 맞교환과 관련해서 일부 주식교환의 경우 출자주식에 대해 회계법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감정하면, 이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적정성 심사없이 등기가 가능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KOVA**